



핵폐기장 논란

핵 폐기장 논란을 주제로 한 MBC 100분 토론이 7월 31일 11시부터 연 2주 째 열렸다.

찬성측 토론자는 산업자원부 김신중 에너지산업국장, 김종규 부안군수, 송명재 한국수력원자력 연구개발실장, 반대측 토론자는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 이현민 핵폐기장백지화대책위 정책실장,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전수거물관리센터(원전센터) 부지선정 절차와 부지선정위원의 객관성 ▲핵폐기장의 안전성 ▲자료 공개 여부 ▲주민투표 ▲원전센터 건설 시급성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원전센터 부지 선정 절차, 제대로 진행되었나?

반대측 토론자는 원전센터 부지선정위원 14명 대부분이 정부나 산하기관 인사, 원전센터 사업 시행자들로 구성되어 객관성이 결여됐으며 충분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사결과로 위도를 원전센터 부지로 선정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찬성측 한수원 송명재 실장은 “원전센터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부지 선정은 2-3년이면 충분하고 위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간 세부적인 지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자부 김신중 국장은 “부지선정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핵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객관성 등 인적 구성의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핵폐기장의 안전성

폐기장의 안정성에 대하여 서주원 사무총장은 기상청 지진 자료를 보여주며 부안 지역은 5차례의 지진이 있었다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3.0 이하의 미진으로 사람

이 느낄 수 없는 정도였으며 폐기장은 7.0 이상의 강진에도 견디도록 설계될 거라고 말했다.

▲자료 공개 여부

서주원 사무총장이 “91년 자원연구소 자료에서는 위도가 분명 부적합하다고 되어있는데 군수가 신청을 하자 다시 적합한 곳이 되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산업자원부 김신중 에너지산업국장은 “연구 결과가 다른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자원연구소는 후에 지진연구소로 바뀌었고 13년 후 다시 조사를 벌여 적당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조사한 자료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산업자원부 김신중 에너지산업국장은 “부안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내일 공개하는 게 어떻나?”고 묻자 김 국장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확실한 대답을 피했다.

▲주민투표

김종규 부안군수는 “원전센터 유치에 대해 찬반 양측이 공정하게 홍보하고 평온한 가운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말했다.

반면 이현민 핵대책위 정책실장은 “지금 부안은 공무원과 사회단체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원전시설 견학을 실시하는 등 엄청난 관권과 금권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부안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백지화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했다.

산자부 김신중 국장은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 원전센터의 시급성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정부는 지난 94년에도 99년이면 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발표했는데 아직도 포화상태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 총장은 이어 “연간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양과 임시저장고의 수와 저장 용량등을 감안하면 포화상태는 정부가 주장하는 2008년이 아니라

2015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수원 송명재 실장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추가로 임시 저장고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원전 수거물 포화상태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임시 저장고를 더 짓지 않는다면 이미 발표한 것처럼 200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송 실장은 특히 “임시 저장고 자체가 나중에는 덩치가 큰 방사성 폐기물이 되고 만다”며 “임시 저장고를 늘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300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할 영구처분장 건설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한국전문가 진출 활기

과 학기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장인순)의 방사선분야 전문가인 진준하박사(54세)가 IAEA 원자력응용과학부 동위원소이용산업기술전문관(Industrial Technologist)으로의 진출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진준하박사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산업적 이용 증진을 담당하는 IAEA내 전문관으로 진출한 것은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뿐만 아니라 방사선기술(Radiation Technology) 분야에서 그 기술수준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진박사는 원자력연구소에서 27년간 방사선응용분야에 몸담아 온 전문가로 이번 IAEA 진출로 우리의 방사선기술개발 진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부는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정동락)의 전종하과장(44세)도 IAEA의 사찰관으로 진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과장은 '79년 당시 한국전력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총 23년간을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한 중수형원자로형의 전문가로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IAEA 사찰업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현재 IAEA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전문가는 총 31명으로, 원자력 G5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 원자력의 국제화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사찰관은 14명으로서 사찰관수로 미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3위권 수준이 되어 우리의 핵비확산 의지를 대외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부안군에 방사선연구소.치료기관 건설추진

전 북 부안군에 방사선의학연구소와 치료기관이 들어서고 군산~새만금 신항 사이 23.6 km에 이르는 단선 디젤철도가 2007년 조기 착공된다.

산업자원부는 부안군이 요청한 67개 사업 가운데 수용 가능한 부안종합체육관 건립, 변산해양

종합레저타운 조성, 위도-식도 연륙교 건설, 하서-변산 4차선도로 조기완공 등 38개와 위도관 광랜드 조성사업, 에너지전문대학원 설립 등 23개 부분은 방사선의학연구소를 비롯해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이다.

나머지 부안종합공영터미널 조성, 서해안 생태

공원조성, 정부출연 과학기술연구소 연합대학원 등 6개 사업은 수용불가 또는 미검토로 분류됐다. 산자부는 “건교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회의

를 열어 부안군 지원사업의 우선 순위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RT산업 육성 집중 추진

전라북도가 부안과 정읍, 전주 등에 국내 최초의 방사선기술(RT) 융합 벨리를 구축하는 RT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전북도는 부안군 위도면이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과 양성자가속기 부지로 최종 확정되어 오는 2005년 완공예정인 정읍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와 연계한 RT융합산업 발전비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1월까지 RT산업 발전 및 육성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로 했다.

전북도의 계획은 ▲부안군과 새만금 일대를 양성자가속기와 친환경 미래에너지개발 거점지로 ▲정읍은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활용한 RT산업 핵심지역으로 ▲전주, 군산, 익산은 RT기술 및 인력양성지역으로 각각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전력시장에서의 원자력 역할』국제워크숍 개최

과학기술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관하는 『경쟁적인 전력시장에서의 원자력 과타 에너지원의 역할에 관한 국제 워크숍』이 3주간(8.4~8.22)의 일정으로 대전 원자력연구소 국제훈련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에는 IAEA의 에너지경제 전문가 4명과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최근 전력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아시아 9개국에서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가하여, 세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에너지와 전력문제를 토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적정 에너지원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최근 전력시장이 환경조건의 강화, 전력회사의 거대화 등으로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원자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한 모범사례로써 다른 아시아국가의 미래 에너지원 선택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덕단지 '외국인 과학자' 급증.. 인건비 싸고 실력 우수

대덕 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구소에 외국인 연구원을 비롯 고급 두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에 따르면 나라 별로는 러시아, 중국, 인도의 대학이나 연구소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대덕단지 출연연구소의 외국인 과학기술인은 81명으로 지난해 말의 55명에 비해

47.3%(26명)가 늘어났다.

연구소 별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 지난해 말 15명에서 24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한국 원자력연구소는 지난해 1명에서 9명으로, 한국화학연구원은 13명에서 18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기술 수준이 높으면서도 인건비가 싼 이들 나라 출신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